

산지자원화계획('88~'97)기간의 목재수급정책 성과와 금후 개선방향(상)

김 외 정 / 임업연구원 자원계획과장

1. 목재수급정책의 전개과정

우리나라의 목재수급에 대한 정책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63년 부터이다. 그 전까지는 국내 목재수급량을 90만m³으로 임의 설정하고 50:50으로 국산재와 수입재를 조달하는 수급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수급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목재생산시 부정임산물 단속을 강화하고 목재소비절약운동을 추진하였고 외재도입을 확대하는 정도였다. 1963년이후 부터는 목재소비량을 인구 증가율이나 GNP 증가율을 감안한 목재소비추정방법을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목재수급정책이 시작되었다. 그후 산림청 발족과 함께 1969년에 장기목재수급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즉 1960년대의 목재소비실적, 인구 및 GNP증가율 등을 요인으로 하여 1970~2010년까지 40년간의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목자급율을 기준으로 1975년에는 20%, 2005년에는 원목수출국으로 전망하였다.

제1차 에너지과동과 함께 목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1973년에 제1차치산녹화 10년계획이 시작되면서 상공부, 학계와 장기목재수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때 향후 10년간 목재수요는 연평균 9%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목재자급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목재소비절약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재는 선조림 후벌채, 벌채허가의 삼자연대책임제 등 엄격한 벌채제도의 시행으로 자원증축을 전제로 한 임목만 벌채하게 하여 국내재의 수급을 제한하였다. 외재는 합판용재 등 수출원자재를 우선 도입하고 해외임지개발을 본격 추진하여 개발도입 등 구매도입방법을 개선하여 외재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토록한 시기였다. 이때 목재공급량 중 수출용과 내수용의 비율이 4:6정도였다. 한편 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였고 부가가치가 낮은 펄프용 칩은 부족분의 80%를 외국에서 충당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시기에는 목재의 자급자족 기반조성이 절실한 과제여서 임산물을 원자재

로 이용하는 기업에게 산업비림으로 산림을 소유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1976년말에는 11만3천ha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영세업체에 대한 산업비림의 소유 명령은 실효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후 산업비림실시요강개정(산림청예규제213호, 80.12.15)으로 연간 5,000m³ 이상의 목재를 사용하는 신규 대상업체에 산림소유를 명령하였다.

1979년부터 시작한 제2차치산녹화 10년계획은 산림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장기목재수급전망을 작성하고 산림법시행규칙에 목재수요 및 공급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목재수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게 되었다. 국내재 임목축적 강화를 통한 산지자원화의 목표달성을 위해 별채계획량에 대한 운영세부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1979년 6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상의 연간 총 별채계획량 중 영림계획 70%, 허가별채 30%로 하여 목재수급상에 영림계획제도를 도입 정착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에 경제성장과 건설시장의 활황으로 합판산업 등 목재가공산업이 성장하여 가공용 외재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한 반면 국내재는 절벌정책에 따라 공급이 감소하여 외재의존도는 1976년의 81%에서 1979년에는 91%에 달하였다. 그 후 합판수출이 위축되면서 1988년에는 85%로 다소 하락하게 되었다.

제1,2차치산녹화 10년계획의 성공으로 산림녹화가 완수되면서 1988년부터 산림을 경영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산지

자원화계획이 시작되었다. 산림청 소속이 내무부에서 농림부로 환원되어 정책의 기조나 목표 등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산업화 진전으로 고임금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내재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재도 원목보다는 가공목재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1992년부터 원목위주의 목재수급계획을 가공목재를 포함하여 수립하게 되었고 폐목재의 재활용이 늘면서 폐재가 목재수급통계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2. 목재수급정책의 실적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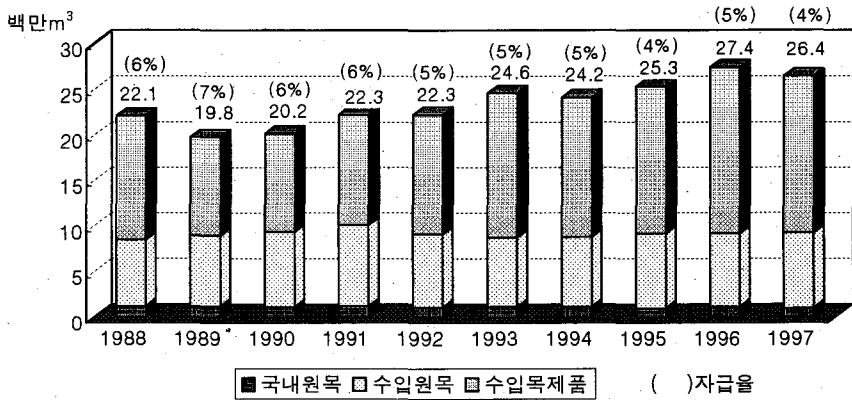
가. 수급정책대상을 가공제품으로 확대

산지자원화계획기간 동안 목재수급에서 가장 큰 변화는 목재수급정책의 대상을 원목에서 가공제품으로 확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원목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국제적 환경변화와 국내목재산업이 가공수출하는 수출산업에서 내수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원목 대신 가공제품을 수입하게 된 국내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정책변화로 평가할 만하다. 즉 수입원목의 수급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원목수급량 중 국내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원목을 기준으로 계산하던 것을 총 목재수급량에 대한 비율로 바꾸어 1992년부터 수급지표로 활용하게 되었다.

계획기간의 목재수급량은 25백만m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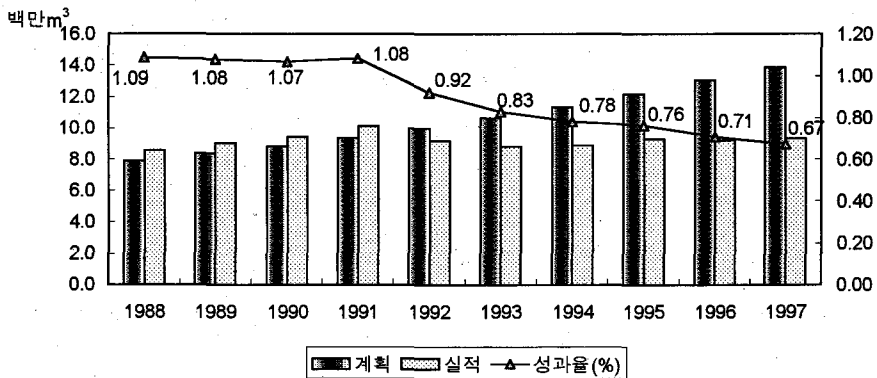
이었고 연평균 1.9% 증가하였다. 반면 원목수급량은 9.2백만^m으로 연평균 0.9%증가에 머물렀다. 국내재 원목의 경우 공급량이 줄면서 원목자급도가 11%로 떨어졌고 수입원목의 공급증가율도 연평균 1.3%에 그쳤다. 반면 수입제품이 급속히 증가하여 연평균 2.6% 증가하였고 총 수급량에서 차지하는 비

율도 1990년에 54%이던 것이 1997년에는 65%에 달하였다(그림 1). 이러한 수입목제품의 증가에다 국내재 원목의 공급 감소로 원목수급실적은 계획대비 87%에 머물렀고(그림 2), 목재자급율은 4%에 불과하여 목재안보(timber security) 차원에서 취약한 목재수급구조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림 1〉 계획기간의 목재수급실적 및 자급율 추이

자료 : 산림청



〈그림 2〉 원목수급계획 대비 실적 추이

나. 국내재 수급구조의 질적저하

목재수급의 수요구조를 들여다 보면 국내재는 산업수요 측면에서 질적으로도 대단히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내산림자원이 III영급 이하의 어린나무가 약 90%로 성숙임목이 많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국내재의 질적 목재수급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벌채대상 자원량이 적어 주벌의 비율이 17%에 불과하여 생산원목의 80%가 말구직경 20cm이하의 소경재이고 국내재원목의 60%가 펄프, 보드류 등 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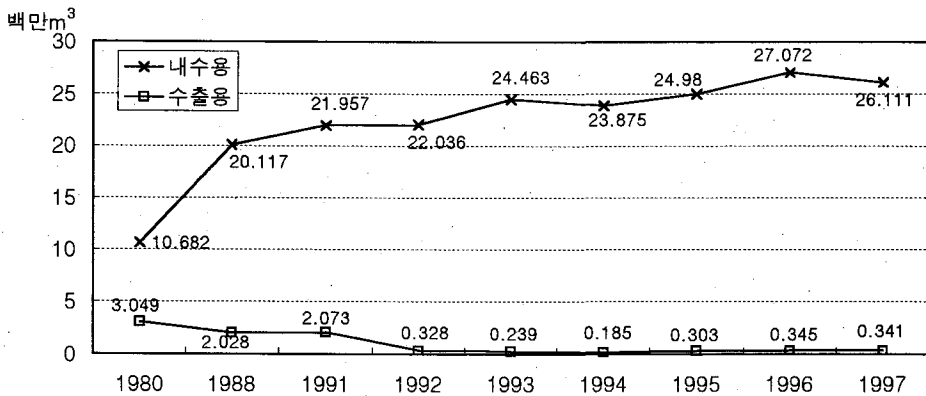
의 용도(펄프, 보드류, 갱목)에 국한되고 있다. 자급율은 합판용은 전무하고 제재용은 4%에 불과하였다(표 1). 계획기간 중에 수출/내수용 수요구조의 변화 폭도 공급원 변화 못지 않게 큰 것으로 기록되었다. 목재수급환경 변화에 따라 목재산업이 수출산업에서 내수산업으로 전환되면서 1980년 22%에 달하던 수출수요의 비율이 1988년에 9%, 1997년에는 1%까지 떨어져 거의 모든 공급목재는 내수용으로 이용되었다(그림 3).

〈표 1〉 용도별 국내재 공급량 및 자급율('97)

구분		합계	갱목용	펄프용	보드용	제재용	합판용
국내재 공급	물량(천m ³)	1,062	104	367	142	449	0
	비율(%)	100	9.8	34.6	8.9	42.3	0
총공급량(천m ³)		26,452	104	8,320	1,602	12,217	4,209
자급율(%)		4	100	4	9	4	0

주) 제재용에 목공예재, 표고자목 포함.

자료: 산림청, 1997.



〈그림 3〉 1991~1997기간 목재수급량의 내수/수출 추이

다. 침엽수외재 수입확대

수입원목의 수급은 물량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수종구성에서는 크게 변화였다. 열대산원목 수입이 어려워지자 원목 대신 가공목재를 수입하고 침엽수재로 대체하는 노력으로 온대산 침엽수원목의 수입비중이 계획기간 52%에서 88%로 증가하여 침엽수재 주도의 공급구조로 바뀌게 되었다(그림 4). 침엽수재 중에도 뉴질랜드와 칠레의 침엽수인공림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급이 급속히 증가한 반면, 천연림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북미산 침엽수재는 환경문제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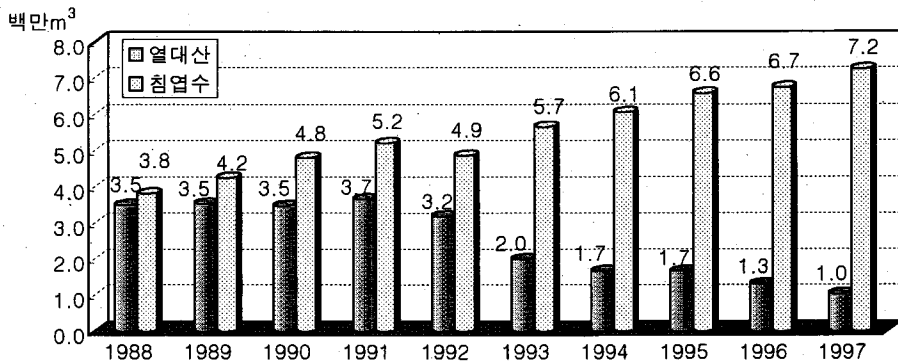
라. 수요관리정책의 현저한 성과

① 합판용 원목의 침엽수재 전환

지금까지 열대림과 천연림에서 생산되던 대경우량재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가공목제품 수입이 늘어났으나 국내재의 대체공급은

자원의 질적 양적인 문제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수입목제품의 공급증가로 자칫 미래 국산재시대의 수요기반이 될 국내의 목제품 가공산업의 기반을 위협하였는데 실제로 80여개의 합판공장이 97년 10개 이내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이 내수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목재의 수요관리가 공급관리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었다.

목재의 수요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가공산업의 원료전환이었다. 합판산업이 공급감소가 예상되는 열대재원목의 이용을 감축하고 대신 안정적 공급이 예상되는 침엽수재로 대체하기 위해 열대대경재 가공시설을 침엽수소경재 가공시설로 개체하여 합판원료 구조개선 작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침엽수재 가공시설은 국산재시대를 대비한다는 데도 의미가 크다. 1993년에 침엽수를 합판제조에 처음이용한 이래 5년만에 합판제조용 원목중 침엽수재 비율이 51%를 기록하는 급속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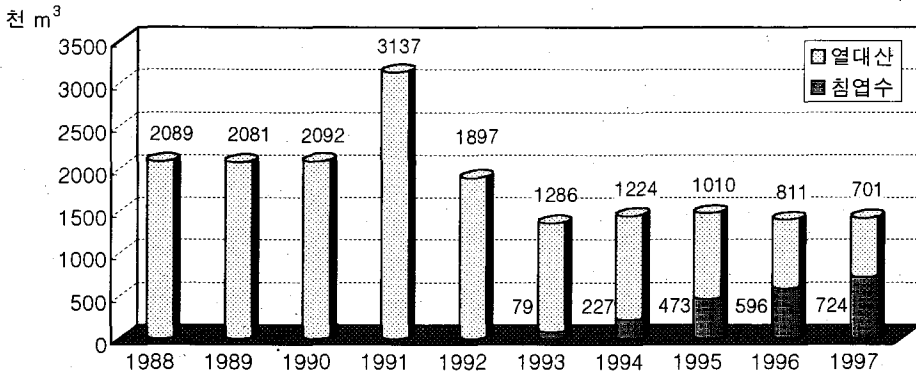
〈그림 4〉 수입목의 산지별 공급실적 추이

자재 구조조정의 성과를 이룩하였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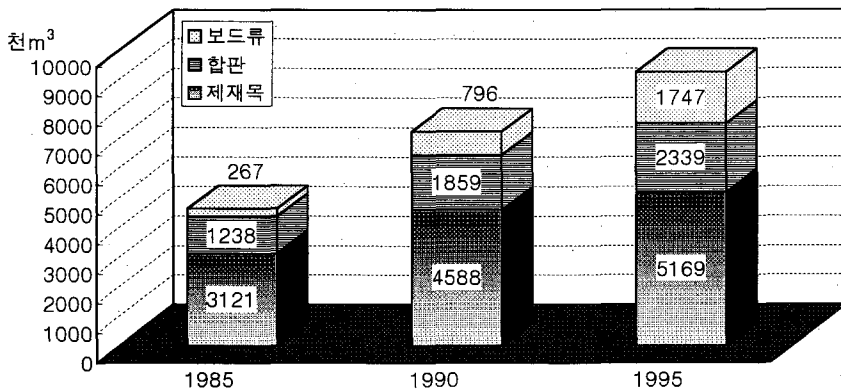
② 재생목재류 공급 확대

계획기간 동안 1차가공목제품의 수급 구조에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특징은 제재목의 비중이 지난 10년간(1985~1995기간) 12%포인트 하락하였고 합판은 1.2%포인트 감소로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해 보드류는 10년전 점유율 6%에서 18%로 상승하였다(그림 6).

즉 국내 가공목제품 수급시장에서 원형 소재 목제품을 재생목제품으로 상당부분 대체하였는데 이는 경쟁력있는 국내산 재생목제품이 목제품 수입을 저감하였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폐목재와 소경재를 원자재로 이용하는 보드공업의 육성지원 정책의 결실로 볼 수 있고 또한 목재 수요관리정책 부문의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림 5〉 합판제조용 원목의 수종별 공급 추이



〈그림 6〉 우리나라 가공목제품의 제종별 수급구조 추이

자료 : 임업연구원, 1996

3. 수급정책의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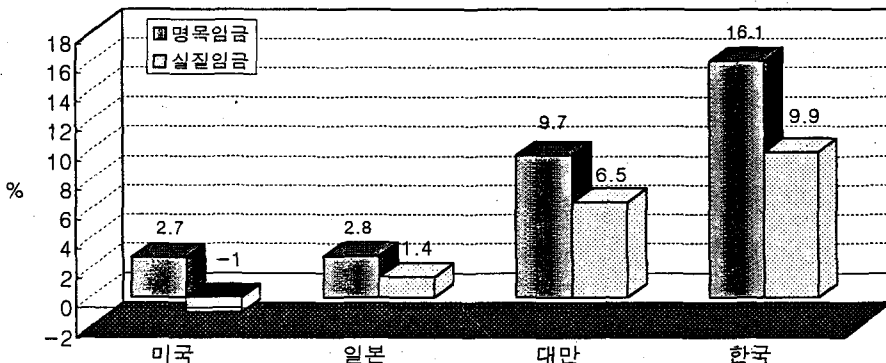
가. 수급정책의 여건변화와 현안과제

목재수급은 우리 산림분야 내부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조절 통제가 힘든 지구적 현안과제와 임업외의 타산업 전반이 영향하므로 외부 여건변화를 몇 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는 것이 수급정책의 현안을 진단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계획기간 초반 정치사회적으로는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노조의 활동이 활발해져 작업시간의 단축과 임금상승의 압력으로 이어졌다. 이시기에 연평균 임금상승율은 16.1%를 기록하여 경쟁국보다 빠른 속도로 고임금구조의 산업체제로 전환되었다(그림 7).

이러한 변화는 전체적으로 노동집약적인 목재가공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요인이 되었고 특히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합판, 제재목 등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내수기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경제적 변화를 보면 계획기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경제규모의 양적확대와 고부가가치산업 위주로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가 추진되었다. 국내 목재시장규모도 1991~1995기간에 건설시장이 연평균 23%의 성장에 힘입어 계획기간 동안 수급물량이 확대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무역규모가 확대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 WTO체제에 맞는 무역자유화, 공산품의 저관세정책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이에따라 합판을 위시한 목제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최근 APEC회의에서 임산물무역의 조기자유화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어 목제품 수입관세는 추가적으로 대폭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등 원목산지국은 자국내



〈그림 7〉 주요 산업경쟁국 연평균 임금상승율 비교('97~'95)

자료 : 재경원, 1996.

가공업육성과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합판, 제재품 등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목재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목재시장에서 마케팅여건이 좋아진 수입목제품은 계획기간 동안 국내목재수급상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1997년 목재수입물량은 25백만m³, 금액으로 약 24억달러에 달하였다.

셋째, 국제적인 환경규제도 크게 확대된 시기였다. UNCED이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지구적 규범으로 등장하면서 각종 환경보전운동이 확산되었다. 열대림보존대책의 하나로 ITTO에서는 사라와크주의 벌채량감축을 권고하였고, 미국복서부의 침엽수도 환경보호로 벌채규제를 받게되었으며 CITES에서는 거래제한 수종을 늘리고 법적구속력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로 국내의 주요 대경우량 원목 및 제재목 가격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목재시장기능을 이용하는 목재인증제 도입을 FSC와 ISO 양대기구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일부 유럽지역에서는 목재인증제를 지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금후 목재인증제의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선진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에 근접한 시업으로 생산되는 침엽수재에 비해 열대재는 목재시장에서 더 많은 규제를 받게됨으로써 공급량이 감소될 개연성이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규범의 변화 이후 실제로 계획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목재수

입을 열대재 천연림지역에서 인공림침엽수림 지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고 수입수종도 침엽수재가 열대재를 제치고 목재공급을 주도하게 되었다.

넷째, 목재자원의 양적감소와 질적저하로 가격상승과 수급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대체원자재 이용기술 개발이 활발하였다. WTO무역환경위원회, EU, 환경경영체계 ISO14000 시리즈 등에서 제조공정 및 폐기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친환경적 가공기술개발을 유도하고 목재자원의 완전이용 및 재활용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친환경적 기술개발의 추세에 따라 목재산업에서는 소경재가공, 폐목재 및 폐지재생 효율을 높이는 공정기술개발로 이어져 집성재, 재생보드류의 생산이 증가하고 신문용지와 포장판지에 폐지재생비율을 높여왔다.

나. 수급정책의 개선방향

(1) 수급실적지표의 개선과 자급율 관리 강화

지금까지 목재수급계획의 성과지표로서 목재자급율을 설정하고 이를 예측하기 위해 국내재공급 가능량을 생산율과 같은 물량적 성장과 벌채율(연간성장량에 대한 연간벌채량), 무육실행율(무육대상면적의 II, III영급면적의 10%에 대한 실행면적)등 제도적 규율로 예측하였다. 특히 1992년까지 원목자급율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노력해왔다. 그러나 원목과 목제품수입이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제품 수입이 늘면 원목의 수입량이 줄어 원목자급율은 목재

수급지표로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입목제품을 포함한 목재자급율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목재자급율도 목재수급지표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대량 기준의 자급율 보다는 가공용과 원료용으로 분리하여 질적인 자급율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재의 공급가능량은 시장원리에 따라 외재와의 경쟁력에 크게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재의 공급량을 예측하는 데는 성장율과 벌채율과 같은 물리적 공급가능량보다는 경제적 공급가능량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목재자급율외에 이러한 경제적 요인을 반영할 경제성지표로서 목표임목가율, 수종별수익율 등을 도입하고 이들 경제성 지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완전개방하의 목재자급율 조절수단으로 관세율이 효과적이다. 관세율의 조정일정을 APEC, OECD, WTO, ITTO 등 다자간회의와 연계하고 국내산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가공목재의 품목간 차등관세율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국내재 공급계획물량은 연차별 목재수급계획(indicative plan)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 계획과 실적간에 괴리 발생시 목재자급율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자원화계획기간 동안 국내재공급계획량 대비 공급실적이 평균 87%에 불과하였다(그림 2). 목재수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조정장치로서 목재수급관계기관 간의 구속력있는 의결협의체를 구성하고 효과

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목재수급 예측방법의 개선

목재수급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목재수급량 예측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인구증가와 소득수준을 기초만으로는 지구환경과 대체재기술개발 등의 외생변수의 요인이 큰 목재수급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는 외생변수를 반영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예측 정확도를 올리도록 해야한다. 수종별 용도별 수요예측도 안정적 목재수급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필요한 예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목재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조사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국내재 벌채량 계획

국토녹화와 임목축적 증강을 위해 절벌정책기조를 유지하였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영림계획운영요강에 표준벌채량을 성장량의 15% 이내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연평균성장량(이용재적)에 대한 벌채량실적이 10% 내외에 그치고 있다. 원래 목재벌채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목재가격과 조림·생산비용간의 변동에 크게 영향 받는데 이렇게 국내재 벌채가 저조한 것도 값싼 수입재가격과 연동되는 국내재 원목가는 실질목재가격이 1985~1997기간 연평균 1.3% 상승으로 정체된 반면 실질조림비용이 17% 상승하는 등 생산벌채비가 급상승하여 국내재생산의 채산성이 취약해졌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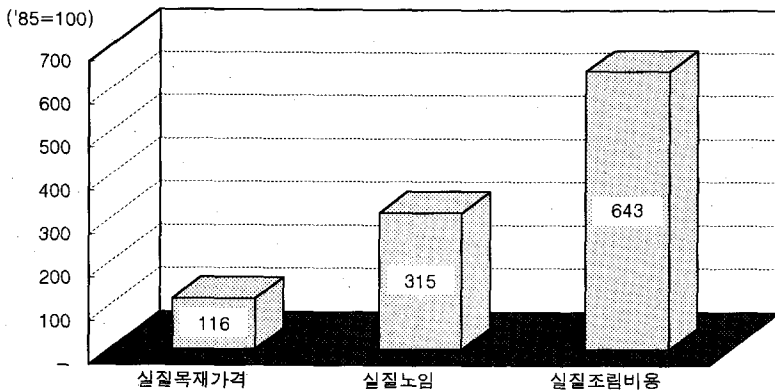
문이다(그림 8). 이렇게 벌채량 산정이 목재시장기능을 연계시키지 못했고 자발적 상향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림계획이 목재수급계획 추진의 조절장치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재 수급량 계획시 시장기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향식으로 벌채량과 조림량을 산정해야 하며 산정의 수단으로서 영림계획 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최근 규제개혁 차원에서 영림계획 제도가 의무제에서 임의제로 전환하고 있다. 영림계획의 지속적 운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국내재수급계획의 조절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국내재 긴급공급체제 정비

지난해 IMF협정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재가격 급등으로 목재가공업체가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현재 목재파동

에 대비하여 목재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국내재 비상공급체제가 없다. 당시 수입목재는 환차손, 금리상승으로 수입원목 유통가격이 31%나 상승하였다. 건축자재비에서 목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이고, 제재목생산량의 70%, 합판생산량의 65%가 건설용으로 출하하기 때문에 환율변동과 건축경기의 급변시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축용재 등의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재의 산지비축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산업용으로 공급 가능한 임지를 신청받아 목재비축림으로 선정하고 해당임지의 목재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산주에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대신 긴급하게 발생한 비상시 목재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는 산주에 벌채명령하여 원목을 산업체에 공급하는 것이다. 산업원자재의 비상공급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운



<그림 8> 국내재공급에 미치는 경제요인의 지수 비교('85~'97)

자료 : 임업통계연보, 산림시책부표 및 농협조사월보.

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요재원의 확보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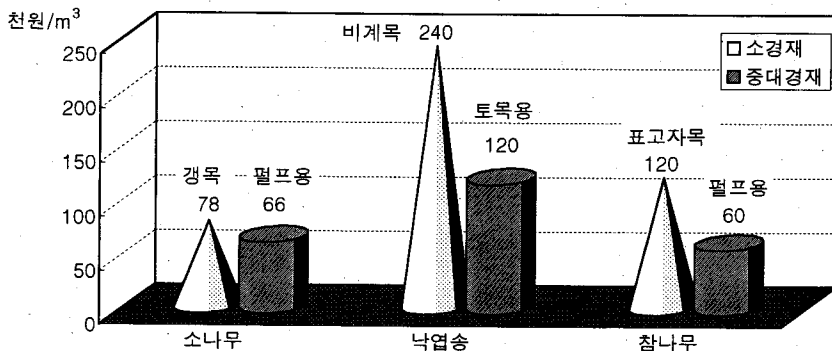
(5) 국내재 자원조성과 재원확보

환경과 무역연계로 대경재의 수급부족과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시장에서의 공급능력과 신뢰도는 바로 가격교섭력과 연계되어 목재가격과 직결된다. 형질우량한 고급재 자원육성을 위해 입지가 양호한 생산임지에 상업림(commercial forest)개념의 집단화 경제림을 조성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간벌과 가지치기 사업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집약적 산림가꾸기 실행에 필요한 새로운 추가적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림공익기능의 내부화를 법제화 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벌재의 적극적인 수집과 경제적인 용도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산림내 방치되고 무육간벌량이 연간 간벌재적의 86%인 88천m³

에 달하고 있는데 이를 반출하여 톱밥, 숯, 목초액 가공용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출공정의 현실화가 요청되고 있다. 또한 반출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직업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체계적인 양질의 대경재육성

우량참나무림과 소나무림을 개별하여 저가의 펄프용재로 대량 이용하므로써 국내산림자원의 손실이 컸고, 중대경재 자원이 빈약하여 이들의 용도개발이 부진하게 됨으로써 중대경재가 소경재보다 오히려 단위목재가격이 낮은 가격역전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국내산 활엽수재는 비싼 가구용재 공급실적이 거의 전무하고 표고자목 공급도 부족하여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서 처럼 펄프용재는 속성수 위주로 원료를 전환하고 해외조림투자에 의한 육성도입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그림 9〉 수종별 소경재와 중대경재의 가격역전 실태

자료 : 임업연구원.

표고자목용재 생산에 맹아갱신시업을 활성화하고 가구용 대경재생산에 택벌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대경재자원 육성에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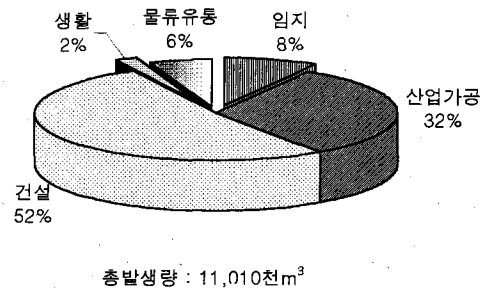
(7) 해외 목재자원 육성 및 자원정보관리 강화

국내자원 육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생산성이 높은 해외조림투자를 촉진하여 자원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보유국과의 협력강화와 자원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간 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최근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논의중인데 해외조림투자시 육성자원에서 얻어질 탄소흡수기능이 투자국의 배출권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평가할 자원계정 분석에 관심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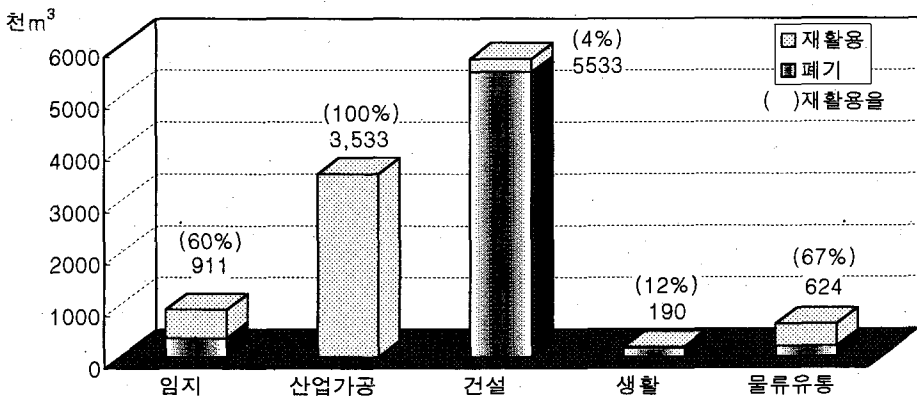
(8) 목재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절약

자칫 폐기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목재자원을 고부가가치로 이용하여 수입목재

를 대체 절감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신소재개발, 환경정화재, 사료, 에너지로 활용하는 기술개발에 투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간 1천만m³에 달하는 폐목재의 재활용율이 43%에 머물고 있어 폐목재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건축폐목재의 지정부산물지정, 불박이장 의무화, 품질인증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관계당국과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0〉 폐목재의 발생원별 발생비율



〈그림 11〉 폐목재의 발생원별 발생량과 재활용율

자료 : 임업연구원, 1998.